



4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호남고속철 노선의 역명이 적힌 '호남희망티켓'을 연출대 흠에 꽂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적용

노사정 협상 타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계 양대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4일 실무급 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 기간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복수노조는 허용되지 시

행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勤怠)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 주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수렴

을 거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4자 회의에 배제된 민주노동당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기공식 참석李大統領

“완공 몇달이라도 앞당길 것”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예산이 허락하는 한 몇 개월이라도 (호남고속철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과 2017년 완공 예정인 광주~목포 구간의 조기 완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호남고속철 건설을 약속했고 완공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고속철도

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성이 있는 것은 민간부분이 하면 되고, 오늘 현재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인프라면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국가가 선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경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고속철도의 건설은 국내적 효과만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철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영산강 살리기는 모두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

업”이라며 “나라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민주당 출신의 호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을 거론하며 “나라와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김완주 전북지사의 열정으로 호남은 이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뒤 오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언급하며 “제가 퇴임한 후인데 꼭 초대해 달라”고 당부,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

타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 지역발전을 위한 국정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 공약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쉽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축사를 통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이라도 빨리 완공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석대·입석대 완전 개방 내년 1월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무등산공원 내 서석대·입석대에 대한 통행시간 통제가 전면 해제된다. 4일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인 서석대·입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간제로 운영하던 장불재~입석대~서석대~군부대 도로(목교) 간 1.4km

구간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주상절리대에 대한 탐방객의 접근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용해 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년여 간 시간제 통행을 운영한 결과 등산객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등

천연기념물 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옛길 2구간 개방에 따른 많은 외지 탐방객이 주상절리대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면개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대강 예산 원안 국토위 소위 통과

민주당 반발 집단퇴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4일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전날 밤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 3조5천억원을 포함해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국토해양부가 예초 제출한 25조6천31억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하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천442억원

증액됐다. 소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의 원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집단 퇴장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